



제주대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된다

감속·우회전 분리차로 등 설치... 교통신호기 등 이설 5·16도로와 1100도로 등 대형화물차 통행제한도 추진 도 "TF 구성해 6월말까지 도내 위험도로 전수조사도"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대 4중 추돌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도가 근본적인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개선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고 원인으로 확인된 대형 화물차량 동선과 도로 입지형태 등을 분석해 교통운영 및 도로구조 측면에서 광범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도는 앞서 지난 4월 제주대 학교 교차로 인근에 발광형 2개의 교통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어 5월 중으로 산천단에서 제주대 교차로 방면 3개 직진차로를 2개 차로만 직진 운영하고, 1개 차로를 우회전 전용차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5·16도로와 1100도로 구간 등 산간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추진한다. 이제껏 도내 도로 사정을 숙지 못한 타지역 화물트럭 기사들은 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만 서귀포에서 물건을 싣고 제주항으로 향할 경우 대부분 5·16,

1100도로를 경유하는 최단거리로 안내되고 있어 위험성이 늘상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4중 추돌사고 당시에도 화물차량은 한라봉 등을 싣고 서귀포에서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도는 차량 과속을 차단하고 속도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구간에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및 속도제한을 하향 조정(60km→50km)한다.

구체적으로는 ▷5·16도로(산천단→제주대 교차로→제주대병원) 2.8km 구간 ▷1100도로(여리목 주차장→어승생 삼거리) 4km 구간 ▷제1산록도로(평화로→1100도로→5·16도로 제주의료원 입구) 21.5km 구간 등이다.

아울러 도는 사고 발생 지점인 제주대 교차로에 대한 도로구조를 대

폭 개선한다. ▷산천단→제주대 방면 감속 및 우회전 분리차로 설치 ▷제주대→아라동 방면 가속차로 설치 ▷제주대 방면(사고 지점) 버스정류장 이설 2개소 설치 ▷교차로 횡단거리 단축을 위한 교통섬 설치, 횡단 보도·교통신호기 이설 등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10개 관계기관은 내년까지 소관 추진부서(기관)별로 사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또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도내 위험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8월까지 위험도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계기로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 제주의료원 임신간호사 산업재해 대법원 판결 1년 "법 개정 지지부진 보험급여 수령 요원"

민주노총 산재사건 토론회 태아 보호 관련법 개정 촉구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 산업재해 판결을 이끌어낸 지 1년이 돼가고 있지만 제대로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10일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제주의료원 산재사건 후속과제와 대응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다.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간호사들은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며 싸웠고, 결국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들은 제대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다.

2세 산재를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법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국회 발의된 산재보상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현승희 위원장은 "정부는 업무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2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산재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한 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우송대학교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근무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신기술에 따른 공법 개발, 신규 화학물질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과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을 단일법 체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단일법 체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직원 퇴직금 떼먹고 총각 행세하고...

지법 "죄질 매우 나빠"... 50대 병원장에 실형 선고

제주에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총각 행세를 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변조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문서변조,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 병원 대표이자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 노동자의 퇴직금 약 3482만원을 기한 내 주지 않은 것을 비롯 총 8200여만원의 퇴직금·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박씨는 2017년 5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 문구를

'이혼'으로, '혼인신고일'을 '이혼신고일'로 변조한 혐의도 있다. 이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교제하던 병원 여직원에게 이혼했다고 속이기 위해서다.

이후 박씨는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켜 배우자가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고 거짓말한 뒤 해당 사실이 담긴 배우자 명의의 각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9년 12월 "내가 겪는 고통 열배, 백배는 고통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교제했던 여직원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멋스러운 제주 초가 10일 화창한 날씨속 서귀포시 표선면 성음민속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 전통 초가를 둘러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축산물 식중독 검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온 상승 등으로 부패되기 쉬운 축산물의 식품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 대상 오염도 지표 미생물 및 식중독 검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염도 지표 미생물 검사는 축산물물작업장에서 도축되는 소·돼지·닭 등의 원료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에서 가공·판매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작업공정별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올해 대표적인 오염지표 미생물인 일반세균수와 대장균수에 대해 1152건(일반세균수 576·대장균수 576)을 검사할 계획이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아파트 복도에서 화재

제주시 애월읍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래,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라둔 오일이 자연 발화돼 화재가 발생했지만 목격자들에 의해 진화됐다.

10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애월읍 하귀리의 한 건물 1층 복도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02㎡이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102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민성기자

제주경찰, 직원 코로나 확진에 '화들짝'

동부서 일부 사무실 한때 폐쇄... 2명 자가격리 조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이 당직을 섰던 경찰관 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제주도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A씨는 직접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은 팀으로 근무하는 경찰관 3명은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씨

와 같이 야간 당직을 섰던 2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A씨와 같은 부서 직원 1명도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같은 부서 직원 등 21명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후 사무실이 있는 민원동을 한때 폐쇄조치했으며 방역 조치를 끝내고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그랜드 보청기

5월가정의달 스타키보청기 구매고객 약 20만원 상당 녹음 선착순 무료 증정

wellnok NEW 뉴 녹음 백세고 스틱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드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스 제품

왜 와이드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드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CGV 광안사거리

☎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 시외버스터미널 ● 오라파출소 ●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층)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2022년 2월달 식재용 탱자묘 1년생 사전분양계약

한림종묘

010-3690-2453